18. 「토지관리 정보체계」 구축사업 착수

자료제공 : 건설교통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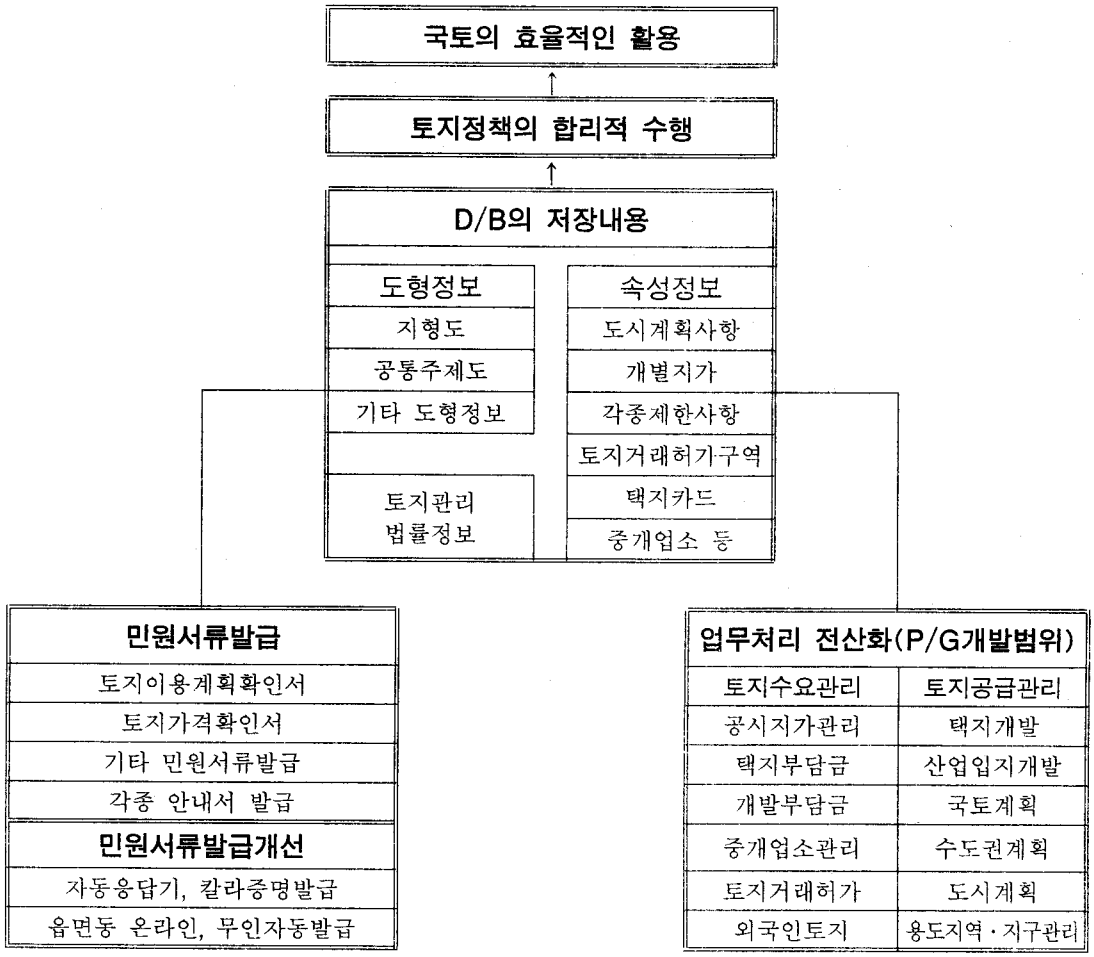
□ 건설교통부는 2001년까지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토지의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전산으로 종합 처리하는 「토지관리정보체계」 구축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.

-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
- 국민들은 개별 토지를 이용·개발하는데 따른 방대한 규제내용을 천연색 도면이 붙은 민원서류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게되며, 가까운 읍·면·동사무소나 백화점등의 무인 자동발급기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.

□ 건설교통부는 우선 '98년중에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국비 14억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'99년부터 2001년까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「토지관리정보체계」는

- 하나의 Data-Base에 지형도, 도시계획도 등 도형자료와, 속성자료, 법률자료 등 토지의 수요·공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저장하여 Data의 중복을 해소하고
  - 토지거래허가제도, 택지소유상한제도 등 토지의 수요와 관련된 업무 6가지와 용도지역·지구관리, 도시계획업무 등 토지의 공급과 관련된 6가지 업무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앙 및 지자체의 토지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
  - 지방과 중앙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수평적, 수직적으로 연결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의 토지정보를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, 지방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전국적인 발급이 가능토록 구성하였다.
  - 토지관리정보체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.



□ 건설교통부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

- 전국토에 개발제한 구역 등을 설정하여 건축행위 등을 제한 하는 법률이 78개이고 이들 법률이 설정하고 있는 각종 용도지역·지구·구역등은 169개로 파악되고 있으나,
  - 현행 토지를 이용·개발할 때 각종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서는 8가지의 지역·지구 등의 명칭만을 확인할 수 밖에 없어
  - 국민은 토지를 구매 또는 이용·개발하기 전에 이 땅이 어떠한 구역에 포함되어 어떠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.
- 또한, 토지관련 업무들이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일선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로

작용하고 있으며,

- 토지정책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에서도 토지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취합하고 있어 급변하는 토지시장의 환경변화를 즉시 파악하여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반영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음.

□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이 완료되면

- 국민들은 개별 필지별로 토지위에 설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용도지역·지구와 행위제한 내용을 천연색의 도면이 붙은 한 장의 민원서류를 통하여 알 수 있도,
  - 가까운 읍·면·동사무소에서나,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무인자동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.
- 건설교통부에서 용도지역·지구 지정현황, 지가변동현황, 토지거래현황, 부동산중개업소 변동현황 등 토지시장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정보를 매일 받아볼 수 있어 토지정책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  - 특히, 토지관련 각종정보를 지형도, 지적도, 도시계획도 등의 도면에 담아 보여주게 되어 국토계획, 도시계획, 지역계획 등 각종 계획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.
- 또한,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전산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.

□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리체계가 구축되는 경우 연간 3,5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

- 행정내부비용의 절감으로
  -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관련 각종 민원을 전산으로 발급함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의 절감과, 수작업 대장관리 업무의 폐기에 따른 비용절감,
  -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산화를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스템 개발비, 연구용역비 절감 등에 따라 연간 2,5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
- 국민 개개인이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비용, 교통비, 주차비 등 연간 1,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주택회보